

#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 권 독 사

신창민교수의 <통일대박은 축복이다>출간을 축하합니다.

저자 신창민교수의 <통일은 대박이다>가 출간된 2012년이래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어야 할 책으로, 이곳 미국에서 수천 명의 독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교수와 필자가 세 차례에 걸쳐 순회강연을 해온 재미동포사회에서도 통일을 위한 독보적인 문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이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지지”라는 성명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저서이기도 합니다. 새로 출판된 책은 <통일은 대박이다>를 보다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여 1/5로 축소된 지면이지만 초점을 파악하기가 보다 수월해 졌으며, 많은 분들의 독후평판을 참고한 것입니다.

신교수의 지론은 허구나 망상이 아니고, 원대한 포부를 피력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현방식과 과정을 풀이해 주고 있으며, 수많은 통일관계 문헌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독보적 역작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립니다.

신교수는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통일이라는 위업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고, 자성하고, 연마해온 인물입니다. 통일얘기를 나누자고 부른다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 갈 각오로 살아가고있는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필자는 저자를 60여년간 가까이 지켜본 절친으로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천사를 쓰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통일을 기원하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자 합니다.

미국 One Korea Foundation 대표

Loyola University, Maryland 명예교수

류재풍

## 차 례

서 .....	7
1. 통일 10년 후 통일 한국 .....	14
G7 가운데 미국 바로 다음 세계 제2위	
2. 우리 겨레 새 역사 시작 .....	17
3. 우리들 실생활 속 관심사 두 가지 .....	18
1) 통일세	
2) 일자리	
4. 통일비용 .....	21
1) 통일비용의 크기 .....	23
2) 통일비용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과 추산의 구체적 내용 .....	24
3) 추산결과 시사점 .....	24
5. 통일이득 .....	25
1) 분단비용 소멸에 따르는 이득 .....	26
- 비 경제적 부분	
2) 통일 직후 10년의 구간 .....	31

3) 통일 10년 이후 .....	35
6. 통일대박을 얻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조건 .....	38
1) 통일직후 10년 동안 북한을 경제적으로 분리 관리 .....	38
2) 바이 코리아안 정책 .....	44
3) 한시적 군비감축 .....	47
4) 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 .....	50
- 기타 직접적인 통일비용 재원 마련	
1) 해외 차관 및 해외 채권 발행 .....	51
2) 국채와 세금 .....	52
7. 또 다른 통일대박 구도가 존재하는가? .....	54
8. 남남 갈등 해소의 길 .....	57
9. 통일로 가는 길 .....	60
가) 이제까지의 여러 3단계 통일 방안 .....	60
나) 실사구시적 3단계 통일방안 .....	61
제1단계 사실에 근거한 통일대박 꿈을 심어주어 통일공감대 형성	
제2단계 북한주민들에게 통일대박의 진면목 전파	
제3단계 북한 주민들이 행동개시 하도록 신호를 보내주어 통일의	

불꽃 점화

10. 북한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	64
11. 북한 민심에 접근하는 구체적 방법 .....	64
- SOC투자, 정보투입, 실생활에서 인간적인 동질 문화적 접근	
12. 북조선 동포들이 알아야 할 것들 .....	71
- 남북 모두 함께 번영하는 통일대박	
- 처벌 걱정 말라. 그러나 기록은 한다.	
북조선 동포들께 .....	71
13. 사실은 .....	76
1) 퍼주기 .....	76
2) 상호주의 .....	78
3) 북 핵 문제 .....	79
4) 평화공존 .....	80
5) 반공, 안보 .....	81
6) 흡수통일 하면 다 망한다? .....	81
7) 갑작스런 통일은 쪽박? .....	82
8) 중국 등 주변 강대국 .....	83
9) 인권문제 .....	84

10) 탈북인 문제 .....	84
11) 신뢰 프로세스의 올바른 방향 .....	85
12) 북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허와 실 .....	86
13) 봉쇄 압박 .....	87
맺는말 .....	89
참고문헌 .....	95
후기 .....	96

## 서

I. <통일은 대박이다>, 좀 경망스럽게 들리는 책이 출간되고 일년 반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작심 발언이 나왔다. 통일을 비용 때문에 부담으로만 느끼고 있던 국민 정서가 급격하게 대반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히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통일대박 내용의 흐름에 따라 일련의 훌륭한 진전 상황이 연이어 나타났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손을 따라 온다는 대 구도를 바탕으로,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이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들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막 시작되던 일들이 세월호의 풍랑을 만나면서 가라앉기 시작 하더니, 이제는 통일대박의 동력이 모두 소진되어 버린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대세의 흐름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넘겨 버린다면 큰일이다. 통일대박을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구호로 여기면서, 이제 머지않아 그 임기가 지나가면 통일대박론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터이니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 첫째,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어 내는 구체적 구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도 아니다. 그가 무슨 경제학자인가? 둘째, 우리가 통일을 안 하려면 몰라도, 실제로 통일을 만들어 내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래 여러 가지 통일대박론이 난무하지만, 진정 유효한 통일대박론은 <통일은 대박이다> 책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통일대박 구도를 그대로 따라서 통일을 만들어 갈 차기 대통령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두 함께 실제로 통일을 앞당겨 만들어 내는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데 있다.

II.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란 말도 틀렸고, 통일되



면 누가 잘 되는 줄 모르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박으로 가는 줄 아는 것도 옳지 않다. 통일 후에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길을 이 책을 통하여 자세하고도 명쾌하게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갖가지 난제에 부딪칠 때마다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북은 북대로 주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체제를 부등켜 안고 있는 상태에서 김씨 일가의 대를 이은 독재권력 유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측 주민들은 상부의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긴장 속에서, 기본적인 식생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힘겹게 살고 있다.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들릴 뿐이다.

남은 남대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구조를 선택해 놓은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매사에 남북분단 상태에 발목이 잡히면서 활력 넘치는 발전을 성큼성큼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근래 경제

가 어렵다고 한다. 일자리가 문제라고 한다. 사실상 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는 실제로 결국 통일이 답이라는 데서 정답을 찾게 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통일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것이 없다. 경제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인권문제를 비롯한 모든 일반 사회문제도 그렇다. 우리 민족 모두가 풍요로운 가운데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격조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통일 없이는 안 된다. 왜 지금과 같은 긴장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야 하나? 현재의 이런 상태로 천만년 그대로 갈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대가를 치르며 어렵더라도 통일을 이룩해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답을 간추려 말하자면, 모두 “통일대박”의 길을 충실히 따라 가면서 우선 통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통일 후에 또한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라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올바른 답이다.

남과 북에서 모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

른다. 그런데 이제는 실감이 가지도 않는 공허한 노래로 들리기 까지 한다. 그렇다면 광복, 분단 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말로만 통일일 뿐, 남이나 북이나 실제로 통일로 가는 길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뒤돌아 보면, 북에서는 고려연방제 통일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뚜렷해 지면서 1991년에 이르러는, 김일성 신년사를 뒤집어 볼 때, 그는 이미 통일을 포기했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먹는 통일”은 싫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대를 이어 오면서 왜 계속 통일! 통일을 입에 올리는가? 그 이유는 북측 주민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면서 민심을 결집시켜야 되겠는데, 무슨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희망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이라도 들먹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 통일이란 한 마디로 내부 결속용 구호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체제가 모두 몰락해 버린 지난 세기의 세계사 속에서, 고려연방제로의 통일이란 의미도 없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김씨 일가가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다.

한편 남에서는 북을 거추장스럽게만 여길 뿐, 내면적으로는 통일로부터 거리를 두는 국민정서가 팽배해 있었다. 남한 국민들은 방대한 통일비용에 눌러 통일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 근시안적 정서를 타개하기 위하여 통일에는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또한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이 필요 했다. 그리하여 필자는 연구 끝에 통일로부터 얻는 방대한 이득의 길을 2007년 8월에 이르러 찾아내었고, 2012년에는 “통일대박”이라는 이름을 붙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남북이 분단된 처절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자. 경제가 어려운가? 일자리가 어려운가? 바로 여기에는 통일에 근본적인 답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재삼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되겠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다.

즉 경제와 일자리를 놓고 볼 때, 통일이 되기 전에도 통일이 답이고,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이 답이다. 왜 그러한가?

우선 통일 후 통일을 마무리 짓는 안정화 단계부터 알아보자.

통일후의 상황을 보려면 통일비용 내지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과 통일이득의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 하다.

결과를 먼저 말 하자면 “통일대박”의 구도를 따라 간다면,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남북 전 지역 1인당 평균 GDP는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로 올라 선다. 우리 민족사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천지개벽과 같은 별천지에 이른다. 이 진실한 내용에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은 실제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필자는 국내외 여러 곳에서 보게 된다.

## 1.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

G7 가운데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제2위

2015년의 세계 주요국 1인당 GDP와 인구 추산 통계를 참고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 주요국 1인당 GDP <2015>와 인구 규모

국가	1인당 GDP (단위 : US\$) <2015>	인구 (단위 : 천명) <2015>
미국	\$ 55,759	321,329
영국	43,734	64,088
독일	41,181	80,854
프랑스	36,170	66,554
일본	32,481	126,920
중국	7,855	1,367,485
한국	27,340	76,177 (남북한 합계)

자료 :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국제통계편 2016.3

CIA Factbook 2016, 각국 인구통계

통일한국이 통일 후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경제를 10년간 운용하여 나갈 수 있다면,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다. 가령 남한의 1인당 GDP가 3만 2천 달러 정도인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 10년간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 성장 끝에 1인당 GDP가 8만 2천 달러에 근접한다. 그 과정에서 북측지역의 1인당 GDP는 남측 지역 추세성장의 절반을 따라 오게 만든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북경제를 완전 혼합시킨다면 통일한국 1인당 GDP는 6만 2천 달러를 넘는다.

<표2> 한국통일 10년 후 G7의 1인당 예상 GDP

국가	G7, 1인당 예상 GDP 한국통일 10년 후(US\$)
미국	US\$73,139(6만)
통일한국	62,021(3만2천)
영국	56,199(4만9천)
독일	52,452(4만8천)
프랑스	49,955(4만1천)
일본	47,457(3만8천)
중국	<7,855>

(괄호 안: G7의 한국통일 시작연도 시점에서 1인당 GDP 개략적 추정치)

이것을 위의 <표1>에 나타난 주요국 1인당 GDP의 예상되는 변화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위의 <표1>을 토대로 장차 예상되는 한국통일 시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1인당 GDP를 대략 각각 3만 8천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상정 하여 보기로 한다. 그로부터 10년간 매년 2.5%의 경제 성장률을 가상할 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은 대체적으로 5만 내지 5만 6천 달러에 이른다. 한국통일 시 미국의 1인당 GDP를 6만 달러 정도로 가상하고, 매년 2%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본다면, 10년 후에는 7만 3천 달러가 된다. (국가경제는 선진화되어 갈수록, 일반적으로 그 성장률이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약 6만2천 달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미국 바로 다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G7진입 정도는 문제가 아니다.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세계 제2위이다. 지금으로서는 다소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을 배경으



로 하는 이 추정치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와 같이 되도록 온 겨레가 단합하여 총력을 기울이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해 낼 수 있다.

이것이 왜 허황된 소리가 아니냐 하면, 이 경우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시경제에서 확실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래 통일대박이란 말이 회자되니까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통일대박을 얻을 수 없다. 골드만삭스, 통일준비위원회, 금융위원회, 짐 로저스 등에서 나오는 구도 정도로는 대박을 얻을 수 없고, 그저 공허한 말들일 뿐이다. 내용은 뒤로 한다.

## 2. 우리 겨레 새 역사 시작

이와 같이 1인당 소득,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로 입지를 굳히면,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역

사의 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까지 반만년 동안 우리 겨레는 대륙과 해양의 양대 세력 사이에 끼어 무수한 환란을 겪어 왔다. 대륙에서 힘이 생기면 우리 민족 수십만의 여성들이 끌려가는 말도 못할 끔찍한 수난을 당했다. 해양에서 세력이 생기면 우리 땅은 초토화 되기도 하였고, 종당에는 그들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우리는 대륙의 힘에 밀리고 해양의 힘에 얻어터지면서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대박론에 제시된 구도를 충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형세는 통쾌하게도 완전 역전이다. 핍박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겨레가 힘차게 우뚝 설 차례다. 이제는 대륙과 해양 양방향으로부터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륙 해양 양방향으로 동시에 힘 차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구도에 서게 된다. 이 아니 통쾌하고, 너무나도 훌륭하지 아니한가? 가슴 벅찬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겨레의 미래상이다.

### 3. 우리들 현실적 관심 속의 두 가지

우리는 근래 현실적으로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 1) 통일세

우선 확실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통일비용에 따르는 통일세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납부하는 형태의 통일세는 통일 전에는 북측의 민심을 가져오면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동시에, 통일 후의 일을 단축시키는 데 소요되는 것으로서, 우리 총소득의 0.25%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통일 후에는 10년 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총소득의 1% 세금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그 밖의 통일 관련으로 납부할 직접세금은 없다. 그 기간에 1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2) 일자리

지금 남한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나 탄식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완전히 빗나간 기우에 불과하다.

우선 통일 후 10년 동안은 남북 지역을 경제분야에 한하여 분리 경영관리하는 것이 필수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넘쳐난다.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북측 소요 자본재 생산 때문에 남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또 제반 체제 단일화 과정에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실업은 자취를 감추고 완전고용 상태보다 오히려 그 이상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다.

또한 통일 전에 있어서도 상황을 보아가며 북측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서서히 착수하기로 한다면, 북의 민심으로 다가가면서, 북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데 따라 남한 국내 경기가 활성화 길로 접어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대박 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은 통일비용 내지 통일자금과 통일이득을 함께 종합, 분석해 보는 데서 알아볼 수 있다..

## 4. 통일비용

우리가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통일자금과 비용이라 함은

-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 비용
- 정치, 행정, 군사, 교육, 사회, 문화를 비롯한 여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 제도, 체계를 일원화 시키는데 소요되는, 제반 체계 제도 단일화 비용
-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은 모두 안정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물론 그 가운데 자본 조성 부분은 경제전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편의상 통일비용이라는 범주에 편입시키는 배경은 이 부분이 반드시 조달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통일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일차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라고 하기보다 필수적 지출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일상적인 투자란 손익 계산에 따라 투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에 있어서 북측의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란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필수라는 점이 다르다.

이 투자자금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북측 지역에 생산 활동을 위한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을 형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한국의 ‘국부’로 남게 된다. 때문에 세월에 따라 감가상각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출과 함께 소모되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의미의 비용과는 전혀 다르다.

각종 통일 소요자금과 비용을 이상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때,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위기관리비용과 각종 제도, 체계의 단일화 비용은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염려할 부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북측 지역의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1) 통일비용의 크기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 자체를 분석해 보면, 10년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최신 자료를 토대로 통일 소요자금을 추산한 결과를 보자.

[표3] 통일 소요자금 추산 결과 요약

남북 간 소득조정 연도	억 달러 (2013년 불변가액)	남측 GDP 대비 비율
2026-2035	13,800	6.4%
2031-2040	15,662	6.4%
2036-2045	17,755	6.4%

자료 : 신창민<통일은대박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수순을 밟는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통일은 2025~2030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그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일비용 크기는 통일을 기점으로 10년 동안 남한 GDP 대비 대체로 7% 정도 이다. 이 크기는 위의 <표 3>에 나타나는 실물자본조성비용에 위기관리비용과 제반 제도 체제 단일화 비용을 합산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한 것이다.

## 2)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과 추산의 구체적 내용

통일 소요자금 산출 각 단계별 계산 과정은 <통일은 대박이다> 책의 뒤 <부록 1>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통일10년 후 북측 지역 1인당GDP를 남측의 절반을 목표치로 하여 소요되는 실물자본의 크기를 감가상각 부분을 감안하며 산출해 낸 것이다.

## 3) 추산 결과 시사점

위의 방법에 따라 추산된 결과와 함께, 후술하는 조달



방안들을 기초로 분석하면 다음 결론에 이른다.

첫째, 우리는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액수에서뿐 아니라, 통일 당시 GDP 대비 상대적 부담 비율에서도 유리하다.

이 두 가지 결론에 더하여 다음에서 보게 될 통일비용 조달방법에 따른다면 획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 즉, 남북 소득조정 기간 중 북측 경제를 분리 경영하는 과정에서 ‘바이 코리아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미리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면 (남한 입장에서만 따져도) 통일 후 10년의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에 매년 GDP성장률 11%를 이루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 5. 통일이득

다음에는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통일 바로 그 시점에서 분단비용 소멸에 따르는 이득.
- 2)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10년 기간 동안 나타나게 되는 방대한 경제적 이득.
- 3) 그 다음 통일 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득과 번영.

### 1) 분단비용 소멸에 따르는 이득

남북분단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분단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분단비용이 통일과 동시에 그 원인 자체가 소멸되므로, 더 이상 분단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만큼의 이득이 있다. 즉, 분단비용이라는 막대한 부(負)의 크기가 소멸되어, 원점이었던 영(零)으로 돌아오게 되는 차이를 의미한다.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모든 기회비용으로서 분단 상태에서부터 유발되는 인명 살상, 이산가족 고통을 비롯하여 모든 불편, 불안, 불이익, 손해, 손실, 과도한 국방비, 인력

낭비, 위험 부담 등 일체를 포함한다.

이에 따르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보면,

-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체하여 매년 GDP 2%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생산재·소비재를 증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승수효과에 따라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 남측 군 인력 감축으로 10년 조정 기간을 통하여 단·장기적으로 대체로 연간 GDP 2.4% 규모를 증산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이후에도 그 보다는 적더라도 역시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
- 청년시절 인적자산을 최대한 증진시켜야 함에도, 분단 상태에 따르는 군개병제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던 기회를 다시 회복한다.
- 북측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점차로 확충되면서 그 동안 큰 활용도가 없던 북측지역 지하자원들이 진가를 발휘한다.
-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남측 입장에서는 대륙으로의 육

상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비를 포함한 제반 물류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 지역 상공으로 통과하는 항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추가되는 연료 등 추가적인 비용과 심리적 거리감을 떠안아야 된다. 이로 인한 불이익, 낭비가 사라진다.

- 대륙과의 통로가 열리면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하여 저렴한 천연가스 직수입이 가능하여 에너지 조달에 크게 기여한다. 생산단가 저하와 국제경쟁력 제고가 뒤따른다.
- 남북 통합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로부터 오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각종 과학기술의 보완적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가운데 북측에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가 있다면, 이를 남측 시장성 관련 노하우와 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남측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에 드는 비용이 턱없이 비쌌던 이유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실제 소요

이상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웃돈 역시 분단에 따르는 비용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제거되는 이득이 생긴다.

- 금강산은 명시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관광이 가능하다. 백두산, 묘향산 등 북측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명승지는 갈 수도 없다.

이러한 관광자원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만족도와 이득은 통일과 함께 다시 찾을 수 있다.

- 분단으로 말미암아 철조망 등으로 일그러졌던 남북한의 금수강산 많은 곳이 모두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이 그만큼 쾌적해지고 훌륭한 관광 자원들이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된다.
- 명산 아름다운 암석에 흉물스럽게 깊이 새겨놓은 전제군주 김씨들의 이름, 정치구호를 제거해 버리며 제 모습을 찾아 환경 훼손을 제거 하게 된다.
-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우려가 불식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이로써 국

내에서의 고용 창출효과와 GDP 증가를 얻게 된다.

- 분단상황에 따르는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이득을 얻는다.
- 한국에 대한 평가절하(Korea Discount) 현상이 사라진다. 증시도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된다.

**비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 이산가족들이 통한을 풀고 분단의 아픔을 해소한다.
-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남북 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사라진다. 이에 따른 인명살상의 불행과 손실의 원인이 제거된다.
-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여파로 일상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긴장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평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 북측주민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인권이란 단지 사치스런 허상이었던 상태로부터, 자유의 인간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 과거에 국방·안보 문제 때문에 수시로 나타나던 일상 생활 속에서의 불필요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 분단 상태에 따르는 국가 위상의 약세로부터 탈피하여 드디어 강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며, 국민들은 해외에서 당당한 국가의 시민에 합당한 위상을 얻게 된다.

## 2) 통일 직후 10년의 구간

통일 직후 남북 간 소득격차 감축을 위하여, 당시 남측 GDP 대비 약 7%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투입이 매년 북측 지역에 이루어짐에 따라 북측 생산능력이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측의 1인당 소득은 남측의 절반까지 따라온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실물자본을 남측에서 생산·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남측 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중심으로, 통일 후 10년 동안 남측에서는 통일비용 조달에 따라 형성되는 “유효수요 (Effective Demand)”를 바탕으로, 매년 11%에 이르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만든다. 이것은 실로 대박이다.

이에 따르는 이득, 편익, 수익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 북측 생산을 위한 실물자본 형성 과정에서 “바이 코리안” 정책에 따라 10년 동안 매년 남측 GDP의 7%에 육박하는 자본재를 대부분 남측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길로 가자. 이에 따르는 생산효과, 승수효과 그리고 산업연관효과 등은 실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경제는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성장으로 지난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적 도약 이래 다시 한 번 그를 능가하는 제2의 눈부신 경제 도약을 이루어 낸다.

#### - 남측

매년 11%의 경제성장 :

- |                        |             |
|------------------------|-------------|
| 1. 바이코리안 정책            | GDP 대비 5.6% |
| 2. 추세성장                | 3%          |
| 3. 병역 의무 해지로 인한 생산성 증가 | 2.4%        |

\* 기타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 대륙으로의 통로, 규모의 경제 등, 별도 추가분 존재)



계 11%

- 북측

통일 10년 후, 남측 추세성장 소득의 절반 목표 달성

- 통일이 되어 대륙으로 향하는 철도, 도로, 항만, 항로, 통신 등이 제한 없이 연결되면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의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살려내어 대륙으로의 직접 진출이 가능하다. 물류비용, 교통비용의 절감과 해외시장 확대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하여 통일한국은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동아시아권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해양과 대륙 사이에 위치한 입지여건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피해가 컸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유리한 강점으로 변하여 대륙과 해양, 양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전화위복의 시대를 맞게 된다.
- 바이 코리안 정책에 따르는 자본재 생산을 위한 인력과 제반 제도 단일화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수

요로 말미암아, 인력이 모자라는 국면이 나타나 실업은 자취를 감추고 일자리가 넘치는 상태로 가게 된다.

- 분단된 상태에서 북측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는 별 소용가치가 없던 북측의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러시아로부터 오는 직통 천연가스관 설치를 통하여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한다.
- 경제규모의 확대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이득도 얻는다.
- 통일 이후에는 통일한국의 국민이 된 북측 주민들이 전체 국민의 1/3이다. 이들은 인간 이하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단숨에 선진 국가의 당당한 국민이 되는 이득과 위상을 얻는다.
- 통일을 계기로 소유권과 사용권 분리 형태의 토지공개념제도 시행을 북측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부동산 투기라는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실패의 한 가지 고질적인 원인을 제거하며 효율적인 시장경제의 틀을 갖춘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과 함께 합리적이며 공평한 소득분배 틀을 얻게 된

다. 이로써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다.

### 3) 통일 10년 이후

통일이 이룩되어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분단국가로부터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부수하게 되는 유·무형의 많은 이득을 얻는다. 즉, 남북 소득조정 기간에는 물론, 통일 마무리 이후 안정적인 국가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게 되는 평화 속에서의 행복한 생활, 그리고 통일에 수반하는 이득, 이익, 이윤 생성, 규모의 경제, 인구·국토·지하자원 등 생산요소 증가, 기술발전 등이 따른다. 제반 분야에 있어서 편리함, 편의성, 그리고 국가 전반적 차원에서의 경제성장·발전, 자본 축적, 국력 신장,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 등이 따라 온다. 한 마디로 평화 속의 번영을 맞이한다.

이러한 이득, 편익, 수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소득조정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북측 지역에서는 그동안 자본 축적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사실상 계속 자본재 수요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남측 경제 활황을 추세에 따라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 남북 간 생산자원 보완성을 실현시키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 북측 지역 자본 조성에 따라 북측 생산·소비 수준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통일로 인하여 확대된 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제경쟁력도 더욱 커지게 된다.
- 북측 지역에서는 뒤늦게 개발되게 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거의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격으로 계획적인 경제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이러한 연관 가운데 전국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지역에 따라 조화롭고 바람직한 경제벨트와 생활 양태를 형성할 수 있다.
- 농업 분야에 나타나는 한 가지 측면은 황해도, 평안도

등 북측 지역에서 화학비료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은 토질을 그대로 살려서 순환 유기농법체계를 도입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어서 좋다.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은 질 높은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생활 향상과 건강에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 남측 지역의 경제 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측 지역 산출량 증가를 통하여 규모가 커진 경제력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영토와 상당한 규모의 인구 확보로 명실상부한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다.
- 통일 후 남북 지역 간 경제적 분리관리 후 전국적으로 혼합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 병행하여 이루어 내게 될 제 분야에 있어서의 체계 단일화와 함께 명실 공히 통일국가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 통일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통일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아무도 쉽게 여길 수 없는 강국이 된다. 국제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당당한 국가의 위상이 된다.
- 통일한국은 이후 대대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훌륭한 위상과 민족자존의 영광을 갖게 된다. 통일은 사실

상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독립운동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밖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통일 이득·편익들을 추가한다면,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의 크기는 그만큼 통일비용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큰 격차를 나타내게 된다.

## 6.\*통일대박을 위한 네 가지 필수 조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통일이득은 그냥 통일만 된다고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다음 네 가지는 확실하게 대비하고 확보할 때 얻을 수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 높이는 데 근간 핵심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통일 후 10년 동안 ① 남북을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은 분리경영 관리, ② 바이 코리아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③ 한시적인 군비 감축, ④ 북측 토지 원소유주에게 현금보상 및 북측 토지 등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순조롭게 실현시키려면 사전적으로 국

민들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그 대책에 관한 공감대형성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알맞은 시기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1) 통일 직후 10년 동안 북한을 경제적으로는 분리 경영 관리

남북소득을 조정하는 10년의 과정에서 북측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이전지출을 통하여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물고기를 잡아 주는 방식보다,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이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측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통일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독일에서처럼 통일 후 즉시 혼합시킨 다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사회보장방식을 위주로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단순히 우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통일비용이 2배로 뛰고, 세금 부담만 따로 본다면 무려 8배로 경충 뛰어버린다. 단순히 2배가 아니다.

이와 같이 10년 동안 경제 부분에서만은 분리 관리하는 이유는 통일 시점에서 북녘 주민들을 차별대우하려거나 통제지배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측 주민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잘 살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방법으로 할 때, 모든 북녘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다.

분리관리가 불가피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의 발전단계 초기에는 자유시장경제 보다 계획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현격하게 낙후된 북측 경제를 일정 정도까지 급속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계획경제가 제격이다.

둘째, 북녘 주민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을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각각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은, 필요 이상의 힘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의 완전 적응이란 분단되어 있던 기간 만큼 다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을 우선은 한 곳에서 함께 집단적으로 적응·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사회주의 속성장 그들은 대부분 생산성에 있어서도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이들에게 생산 활동 재훈련 과정에서 개개인을 위하여 일일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엄청난 낭비다.

셋째, 통일 후 지역 구분이 없이 혼합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면 동일한 종류의 일에는 동일한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성 차이도 문제다. 또 그 위에 실제로 임금, 봉급 지급 총액이 실로 과다하게 되는 것도 통일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정도 이상의 임금, 봉급을 지급하게 되면 독일에서 처럼 오히려 북측 근로자들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즉 그들이 생산한 것은 품질에 비하여 단가가 높아짐으로 잘 팔리지도 않는다. 결국 공장이 문 닫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실업자로 전락하도록 만들게 된다.

소득조정 기간에는 그들은 그들대로 그들의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봉급을 지급 받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으로 보나 본인들의 결과적인 실속을 위해서나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넷째, 남측 사람들과 구분 없이 바로 섞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생산성에 있어서 격차가 쉽게 노출 된다. 현격한 소득 격차가 따른다. 자연적으로 1등 국민 그룹과 3등 국민 그룹이라는 차별화가 확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차별 의식과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

다섯째, 분리관리 10년 기간 동안에는 북측 지역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 차이도 큰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에 익숙하지도 못하면서 자칫 과도한 요구에만 맞을 들여 경제 전반에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분리관리가 이루어질 때라야 마찰이 적을 것이다.

요컨대 분리관리는 비효율성을 피해가면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무리수의 발생 소지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통일 후 10년 동안은 분리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성공적 통일이란 단순히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런데 남북 분리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꽤 많다. 그러나 분리경영관리는 다음과 같은 틀을 바탕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첫째, 유인효과(Pull Effect)가 있다. 각자의 본래 거주 지역에서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본래 거주지역 인근에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상황인데, 불확실성 속에 묻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방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동시에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안으로 밀어 넣는 억제효과(Push Effect)도 함께 작용시킬 수 있다. 북측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당분간 지속적으로 법 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해도 새롭지 않다.

셋째, 그 위에 통일 직후부터 식량, 피복, 의약품 등 생필품과 최소한의 생활보조금 등이 북측 주민들이 본래의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각자의 본거지에 서만 지급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바이 코리안 정책 (Buy Korean Products Policy)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하여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의 크기를 극대화 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통일대박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 정책 개발의 결과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떠 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상황에 처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가까운 강대국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한의 절반에 이르게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 규모에 이르는 실물자본이 북측 지역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 남한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결정적으로 기회가 닥칠 때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후 그들에게 무슨 물질적인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 봐주기만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말한 GDP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 가운데 적어도 8할 이상이라도 남한에서 생산·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남한 GDP의 5.6%에 해당하는 실물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남한 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러한 바이코리안 정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고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을 보기도 한다. 이를 위하여 일부는 우선 우리 내부 규정을 통하여, 기술적 처리 방법으로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 위에 우리는 통일 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장래를 위한 구상을 장래 이해당사자가 될 강대국들의 사회지도자급 인사들 층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전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을, 바로 목전에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게 된 상황에서 하려 한다면 이미 늦었다.

이러한 바이코리안 정책에 따르는 생산 증가 5.6%에 더하여, 부분적 군 병력의 산업 인력화에 따르는 생산량 증가 2.4%, 그리고 추세적 성장 잠재력 3%를 합산하게 되면,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경제는 매년 물경11%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고, 당당한 일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현

실적 구도이다.

우리가 통일비용을 놓고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아주 간단하게만 따져 보아도,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 통일은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얻는다. 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불황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경제 성장까지 더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누가 통일을 마다하겠는가? 우리는 돈을 쓰는 통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통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特需)에 따라 나오게 되는 순 이윤을 얻게 되는 기업들은 그 가운데 일부분을 일반세금이 아닌 특별기여금(가칭)으로 별도로 납부하도록 한다면 전술한 통일비용 종류 중 비상사태 대처 위기관리비용, 제반 제도 체계 단일화비용 등에 해당되는 소모성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 3) 한시적 군비 감축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

당해야하는 입장에서 군비 지출을 GDP의 1% 이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정책이 가능할 때 통일 후 10년 동안 GDP의 7% 통일비용 가운데 매년 대략 2%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자위대 유지비용을 GDP 1% 선으로 계속 유지하여 왔다. 우리도 통일 후 우선 10년 동안만이라도 군비가 GDP 1%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누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넘보지 않도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겠다.

그렇다면 비록 한시적이라도 이와 같은 군비 축소가 남한 군부 내부의 반발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회의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도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첫째, 남한 직업군인들은 통일 후에도 직업군인으로서의



각자의 직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 군의 하부구조는 통일 당 시에는 아직 생산성이 취약한 북측 지역 청년들을 위주로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남측 청년들은 바로 산업인력화 하거나, 학업을 지속함으로써 장래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강제로 군에 가야 될 필요가 없다.

셋째, 군의 재편 과정에서 과거 북측의 기간병 이상의 병력은 전원 전역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산업 훈련 과정을 거친 후 생산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 후 상당 기간 동안 북측 지역에서 군 조직이 뿌리 내릴 때까지 남측의 예비역 장성과 장교 대다수가 현역으로 복귀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군 조직을 최단 시일 내에 안착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제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온 한미관계를 배경으로, 특히 편의성을 감안하는 차원에서 통일 후 남북 소득 조정 기간 10년 기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

라 가급적 상당 기간 미군이 통일한국에 주둔하도록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미군의 주둔 위치는 통일 당시로부터 복상하는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한다. 중국이 불필요하게 예민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유럽 다자안보협력체제(CSCE)와 같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 4) 북측 토지 현금보상 및 국유제 유지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 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니라 현금 보상이 답이다. 독일에서는 단순히 원리 원칙론에 얽매어 토지 실물반환 정책을 채택했다가, 일시에 220만 건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또한 과거 남한에서 시행된 토지개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또한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를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 이후 아주 장기적으로 남측 토지제도를 북측 국유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제도 한가지에 한하여는 남측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북측으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는 현행 국유제도를 그대로 계속 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통일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선부른 사유화 후 이를 대상으로 국가가 필요한 만큼 다시 매입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확충하려 한다면 천문학적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내지 천년대계 차원에서 그러하다. 일정한 크기의 토지 때문에 일어나는 토지투기는 만인의 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결함 보완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 나라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구현해 낼 수 있다.

## - 기타 직접적인 통일비용 재원 마련

### 1) 해외 차관 및 해외 채권 발행

통일비용에 필요한 GDP 7% 규모 중 1%에 해당하는 자

금은 IBRD, ADB, AIIB 등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장기저리 차관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 직전까지 북측 지역이 세계에서 지극히 낙후된 국가라는 사실과 통일이 가져올 국제적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을 강조하면서 차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통일한국의 상환 능력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차관 도입 조건도 유리한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한다.

해외 차관에 의한 조달이 GDP 1%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해외 채권 발행으로 보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겠다. 즉 도합 1%의 자금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외 조달 부분이 미흡하게 되면 국내 직접 조달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국채와 세금

통일비용으로 소요되는 나머지 GDP 4%의 부분은 남측 국민들이 직접 조달해야 될 부분이다. 남북 소득조정을 위한 10년 기간에 매년 GDP의 1%를 세금(가칭 지역발전기

금)으로, 나머지 3%는 통일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여기에서 국채는 원리금 상환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대 간 분담의 의미를 갖는다.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과 편익은 통일 후 세월을 두고 세대를 넘어가면서도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시 징수되는 직접적인 세금보다 다소 많아도 큰 문제는 없겠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통일세나 국채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미리 마련해서 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조성하는 것으로 족하다. 통일세 징수로 인하여 경제의 흐름으로부터 불필요한 누출 현상이 일어나 평소 그만큼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통일세 부과 방식은 통일 전·후를 막론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통일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형태로 즉,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소요 자금 규모에 맞추어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담 능력에 따르는 징수 방법으

로서 합리적이다.

방위세를 통일세로 전환하지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과거 대결구도 속에서 나온 발상을 포장만 바꾼 모양이 되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형태로 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는 빈부를 막론하고 동일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역진세의 내용이 됨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적절치 못한 형태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으로 모금하여 비축하자는 의견도 있고, '통일 향아리' 개념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금의 형태로는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 통일세도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 7. 또 다른 통일대박이 존재하는가?

아니다. 위의 네 가지 필 수 요건이 결여된 상태로는 통일대박이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통일대박이란 말이 출현하니까 여러 곳에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제시한 데가 없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를 택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2050년 까지 매년 4% 대의 경제 성장을 해서 큰 수확을 얻는다고 한다. 이런 전제하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북한은 체제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를 택할 수가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도외시키고 되는가?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통일세가 한 푼도 필요 없다고 한다. 금융계와 민간투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면 통일 20년 후에는 북측 지역 1인당 소득을 1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따져보니 남측은 추세성장으로만 보더라도 5만 달러에 이른다. 이것을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통일된 한 국가 안에서 지역간 평균소득이 5대 1이 되고서도 안정된 사회로 남을 수 있겠는가?

또한 통일대박론의 구도 속에서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전세계에서 제2위로 올라서게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니, “아! 옛날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라는 반응이다. 골드만삭스는 수년 전 40년 후를 내다보면서 북한의 지하자원, 우수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막연한 예측을 한 데 불과하다.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어느 유명 강사는 우리가 50년 후에는 세계에서 제1위로 올라서는 통일대박 얻게 된다고 말하면서 열화와 같은 만장의 박수를 받는다. 별 근거도 없이 반세기 앞을 내다보는 경제예측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통일대박이라고 하니까 짐 로저스를 떠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통일대박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거시경제의 종합적 프레임 속에서 현실적인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이 책의 통일대박 구도와는 다만 천양지차일 뿐이다.



## 8. 남남 갈등 해소의 길

**보수와 진보는 보완관계로 인식하고,  
다 함께 통일까지를 목표로**

통일로 가는 동력에 있어 누수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남갈등이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부담감은 통일대박이라는 사실 인식에 따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수 진보간의 남남갈등이다. 남남통합도 못 하면서 무슨 남북통합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 역시 명백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 진보간의 충돌은 정책의 상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미흡에 따른 것이다.

지금 보수 진보 간에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양측이 모두 각

기 반드시 필요한 논리의 근거가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결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두 구도는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 이 두 구도가 합치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힘이 하나로 결집될 때, 통일동력이 완성된다. 어느 한 쪽만의 힘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바, 이는 천만다행이다.

소위 보수 측의 태도는 반공을 바탕으로 북의 공산세력에 대하여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몰락한 공산주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입장이다. 물론 반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 수세적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현명한 분단관리를 한다 해도 그 역시 충분치 않다. 우리는 이제 통일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힘차게 나가야 한다.

소위 진보 진영에는 여러 갈래가 있겠으나, 주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

로 한다.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6.15 선언이나 10.4선언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선언들의 배경을 보면 통일 자체보다는 평화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간파할 줄 알아야겠다. 평화공존이란 평화공존일 뿐이다. 평화공존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어지리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한다면, 이는 공상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공존은 결국 영구분단을 의미할 뿐이다. 많은 진보성향 인사들은 평화공존을 위하여 가급적 북 정권을 자극하지 말고 될수록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만 머문다면 통일은 오지 않는다. 이 역시 통일 그 자체에 직접 목표를 두면서, 북측 주민들의 민심이 통일을 결정짓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실사구시적인 데까지 생각이 미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적시하고자 한다.

양측이 각각 주안점을 두는 안보와 평화는 현실적으로 필수 조건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이다. 이에 더하여 각각 통일까지를 목표로 하면서 북측 주민에게 진정성과 함께 다가갈 때 통일의 물꼬는 트이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통일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국민정서로부터 벗어나고, 보수 진보간의 남남 갈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라면 통일로 가는데 더 이상 큰 걸림돌은 없게 된다.

## 9. 통일로 가는 길

이제까지 우리는 통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대박을 안겨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의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 가) 이제까지의 여러 3단계 통일방안

이제까지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국가연합” 단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대체로 비슷한 3단계 통일방안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사실상 공허한 것들이었다. 모양은 좋지만 실제로 현실성은 없다. 북에서 표방하는 고려연방제 대응차원에서 대외제시 용도의 통일정책 모습으로

는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실용적인 실사구시적 길로 가는 통일방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 **\*통일을 만들어 내는 기본 구도는 R이론 중심으로\***

통일정책의 근간은 R이론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이론이라 함은 북측에 존재하는 우리의 대상을 둘로 갈라서 대처하는 방식의 정책을 말한다. 즉 북정권과 북주민이다. 북정권은 사실상 그냥 협상의 대상일 뿐이다. 협상을 통하여 어중간한 형태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이란 무의미하다. 결국 통일은 북주민의 손을 따라 온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 **나) 실사구시적 3단계 통일방안**

현실성 있는 실사구시적 통일방안이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제1단계:** 남한 국민들이 “통일대박”의 진정한 내용과 구도를 숙지하고 받아들여, 통일지향적인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제까지와 같이 남측 국민들이 통일을 부담으로만 여기면서 남남갈등으로부터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 통일이란 없기 때문이다.

통일대박 구도를 착실히 따라갈 때, 우선 **통일 10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전세계에서 제2위로** 올라선다는 엄연한 사실을 실리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알도록 하여, 이 진실이 우리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으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겨레에게 유사 이래 처음 오는 이 거대하고도 가슴 벅찬 **꿈과 희망**을 온 국민이 확실히 함께 공유하면서 통일 지향적으로 함께 움직여 나갈 때 통일은 가능하다.

**제2단계:** 제1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통일대박의 구도와 실제 전망이, 은연중에 점차로 알려지도록 하여 **그들도 우리와 꼭 같은 꿈과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대박의 구도가 남한만 잘 살려고 하거나, 북한주민들을 이용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평화 속에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사실과 그 진실성을 이해시켜 주어야 한다. 북조선에서 시시때때로 들어 오던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라도 통일대박의 미래가 **남이 아닌 실제로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내면적으로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3단계:** 제2단계의 과정이 성숙되어 가는 길목에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수령 **제일주의와 자력갱생의 북한정권**, 그리고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개인체제를 정리하고,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의 남한으로 합류하도록 결정적 적기에 신호를 보내줄** 줄 알아야겠다. 그리 하여 우리 겨레가 하나된 세계 모범국가를 만들어 내고,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 서는 길을 택해야 한다.

## 10. 북한지역개발 마스터플랜

또한 무엇보다 북한 지역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행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외형적 통일 전에 북한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거나, 통일 후에 북측 지역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이 지침서에 따를 때만 조화로운 개발과 전국을 망라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단순히 각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측 지역을 난개발로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일이 되고 만다.

## 11. 북의 민심으로 접근하는 구체적 방법

북의 민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선 실리적인 면이 결부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대표적으로 통일 후에는 어차피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사회간접자



본 시설 건설에 착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 그 가운데 특히 통일대박론의 실체가 알려지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 • SOC 투자

SOC 투자 협력은 가급적 조속히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1% 수준의 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와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남한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경기진작의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역할의 집행은 공사 형태의 민간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부분까지 정부가 맡아서 하면, 가다 서다 하는 대북정책의 기류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통일을 성취하려면 정경분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 정경분리 정책은

### 통일로 가는 필수불가결의 구도 \*

SOC 건설을 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필요한 기자재 등

실물 자본 일체를 모두 남한에서 생산하여 북측 지역에 공급하도록 하는 점이다. 바이 코리안 정책이다. 여기에 부수하여 필요한 남한의 기술 지원도 가급적 동반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단순 노동 부분은 북측 노동력으로 충당한다. 그 임금 수준은 개성공단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로 진행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남한 GDP의 1% 규모로 하는 것이지만 바이 코리안 정책에 따라 실제 남한 실물 생산과 기술협력으로 남한 경제로 동시에 다시 유입되는 부분을 약 8할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머지 20% 정도의 현금이 북한 주민의 손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 경제로부터의 누출은 결국 GDP의 1% 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에서 그 과업을 달성해 낼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남한 내부에서의 장기 파급효과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그 보다도 더 작은 규모의 기여로 결과적으로는 획기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남한의 1%의 규모는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지연시키다가는 중

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의 후유증이 훗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개성 신의주간 고속도로를 중국이 착공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는 가슴이 덜컥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경제협력을 못마땅하게 보는 인사들이 주장하는 소위 ‘퍼다 주었다’는 것을 모두 합산해 봐야 전부 80억 달러 내외일 뿐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남한 GDP 1% 크기의 자금 조달은,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와 통일국채의 형태로 한다. 세금은 남측 GDP의 1%의 1/4, 그리고 국채는 3/4에 해당하는 크기로 도합 GDP의 1%에 이르도록 한다. 이 자금 마련은 정부가 주관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집행은 정부나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사 형태로 창립**하여 시행한다. 장기 안목에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북한 지역 개발 청사진을 만든 후, 그 청사진에 따라 남북협력공사가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할 경우 우리는 북측을 대함에 있어 그들보다 높은 차원에서, 장기적인 시각의 2트랙 방식으로 포석하며 북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 혼자서 봉쇄, 압박 형태의 단선적인 정책 시행만으로는 운신의 폭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별다른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당국을 상대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정치·군사적인 차원에서 북측의 잘못된 버릇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계속 강경 노선을 유지하다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SOC 투자 노선에 대하여 김정은 집권 연장만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강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전력 사정이 좋아지면 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우라늄 처리비용으로 써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북측의 핵무기 개발 순서도 모르고 또 김정일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 돈이 없었다면 보다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이 더 굶어 죽었을 뿐, 김정일 손에 핵이 들어가는 것은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돈이 들어가기 전에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핵폭탄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조그만 지역에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과 우라늄으로 만든 핵폭탄을 구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결국 핵무기는 핵무기고,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 지역적인 문제들만 들먹이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갑론을박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SOC 건설 제안에 대하여 북한 김가는 그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받아들일 것인가?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하며 무슨 이유를 달아서이거나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자기에게 바치는 조공이라고 걸치레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모기장 이론’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즉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만을 부작용 없이 선별하여 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상 북측 주민들은 이 세상에 태

어나면서부터 바깥과 두절된 상태로 철저한 세뇌교육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진 것이 벌써 수십 년을 지나고 있다. 김씨 일가의 자신감이 전혀 근거 없지도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연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고 말 것이겠는가?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소망사항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끝으로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는 기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노출시키면 어찌 하겠는가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독재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독재자가 아무도 모르게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비밀리에 일을 벌일 수도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밀 유지부터 신경을 쓴다면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놓고 마치 무엇이 있는 양 감추려 드는 희극이 된다. 자유 민주국가인 이곳에서 우리 국민이 통일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그 주체인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그에 맞는 정치지도자들을 배출해 내고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서는 통일이

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기밀유지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리고 근래 한국의 청년실업 20년 불황 일본을 닮아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론적으로 간추려 말하자면, 한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그 활로는 통일이 답이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도 그러하고, 통일 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경제가 어려운가? 우선 통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라. 통일 후에는 통일대박의 구도에 따라 세계에서 어디에도 부럽지 않은 선진 경제를 이루어 내는 꿈과 희망을 갖고 꾸준히 매진하기 바란다.

## 12. 북조선 동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것들

**\* 통일대박이란 남북한을 비롯한 모든 동포들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구도이다.**

북조선 동포들은 통일시 단번에 큰 욕심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통일 후 10년 동안 북

측 주민들은 남조선 측의 협력에 부응하여 생산과 소득의 급속한 증대를 위하여 경제발전의 길을 스스로 열심히 열어서 나아가기 바란다.

**\* 통일 후 차별 위주는 없다. 그러나 기록은 남  
는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북조선 동포들께,**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의 숙원입니다.

이제는 통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때가 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말고 누가 우리 대신 통일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습니다.

통일은 총칼이나 핵무기로도 안 되고, 정치 권력자들끼리의 정치 협상으로도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력 봉쇄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 남조선의 7천 5백만이 넘는 동포들 그리고



모든 해외 동포들이 모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 길을 따라 함께 갈 때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통일로 우리 북 남 조선 인민들은 모두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리며 사람답게 그리고 격조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훌륭한 통일된 나라를 물려 줄 수 있게 됩니다.

통일은 진짜 대박! 입니다. 통일은 남조선, 북조선, 해외 동포들 모두에게 진짜 대박! 입니다.

남조선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예를 들어 3만 2천 달러 정도 시기에 통일이 된다면(현재는 남 2만 7천 달러, 북조선은 겨우 1천 달러 약간 상회할 정도 수준), 그로부터 10년 후에 북조선 인민 1인당 평균 소득 수준은, 놀라지 마세요, 4만 달러를 넘어 섭니다. 자그마치 지금의 40배나 됩니다. 대박입니다! 통일 시점에서 남한의 1인당 소득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로 갑니다. 남북 주민들은 그 후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격조 있게 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어느 선진국에도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3대를 내려오며

약속해 온 “이밥에 고깃국” 이란 그냥 장난스런 우스갯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이 상부의 눈치는 더 이상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니까, 혹시 남조선 사람들이 북조선 인민들의 값싼 노동력이나 지하자원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부터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통일이 되면 북조선 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실물자본을 남조선에서 생산하고 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남조선은 남조선 대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합니다. 북에서는 북에서 대로 그 실물자본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에 따라 눈부신 경제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것을 뺏어먹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박이란 말은 일심전력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게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큰 이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통일 후 10년간은 이렇게 따로따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는 남에서 대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도를 이미 따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남측에서 잡아 놓은 계획대로 합심해서 함께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꾸준히 건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꼭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북에 사시는 인민들은 모두, 하나 빠짐없이 우리 겨레, 우리 동포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우리 혈육입니다. 지난날 이념과 사상의 굴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었던 많은 잘 못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두 덮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김씨 왕조 일가는 망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국외 탈출 필요 없이 함께 잘 살아 가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 잘 못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용서하

**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 우리는 모두 이 길을 따라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서 상생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이미 북한 인권 관련 기록보존소 설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법무부로 이관하여 보존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고, 지금부터라도 북조선 내부에서 서로 지나치게 못살게 구는 일을 줄여나가도록 해 주세요. 통일 후 그 만큼 서로 더 마음이 편해 질 것입니다.

## 13. 사실은.....

1) 김대중이 북에 떠다 주어서 핵무기로 돌아왔다.  
 퍼주면 절대로 안 된다.  
 과연 그럴까?

① 실제로 핵무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단계에 있었다.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김일성이 1990년대 초 인심을 후하게 쓰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둘러 합의를 했는지 짐작이 간다. 시간을 벌기 위함

이었다. 이미 그 때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영변 핵 시설을 쳐버릴까요? 의향을 물었을 때, 김대통령은 “그러면 얼마나 각오해야 하나요?”

대답: “한 백만은……”

김대통령 “……”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후일담이다.

그러면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거래가 없었으면, 핵무기 완성이 될 수 없었을까? 그것도 아니다. 정답은 “더 많은 숫자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을 뿐이다.” 북조선 주민의 숫자는 그냥 숫자이지만, 핵무기는 김 씨 왕조 최후를 담보하는 보루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과거의 소위 퍼주기란 “퍼주는 대상”을 잘 못 선택했을 뿐, 퍼다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북

정권에 퍼주는 것은 이적행위가 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퍼주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더욱이 통일을 위하여 잘하는 일이다. 많이 퍼줄수록 좋다. 퍼주는 것은 맞는데 수혜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말이다. “북한 주민”에게 많이 퍼주어야 통일도 되고, 통일 마무리도 잘 되게 마련이다.

## 2) 상호주의

상호주의란 얼핏 상당히 합리적인 말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준 만큼 바로 그 대가를 받아내는 것은 일반 상행위에서나 하는 일이다.

통일문제 남북문제는 그와 다르다.

- ① 남북간의 관계는 거래를 통하여 서로 이득을 보자는 성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행위가 아니고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관계이다. 단순한 상행위의 대상이라면 이 세상에서 구태여 큰 이득도 없는 북조선 방향을 쳐다볼 일도 아니다.

- ② 남북간 총 경제력은 40대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동족이라고 말은 하면서 동등한 상대의 위치에서 상호주의만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3) 북 핵 문제

정부 입장에서 북 정권에 대고 핵무기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압박 내지 봉쇄로 북 정권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북 정권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핵무기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대가를 받고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무엇이 북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조약에서 서명?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약속? 경위야 여하간 경수로 발전소 건설해준다고 했다가 유야무야된 것을 보면? 한 때 휴전협정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 정권인데, 다른 상대 국가들의 조약은 철석같이 믿을 것이라고 보는가?

#### 4) 평화공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강조하는 인사들은 평화통일에서 “평화”에 방점을 두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평화공존 백 년이 간다고 자연스레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평화조약을 염두에 두는 인사들은 그 다음 순서도 생각해 두기 바란다. 북 정권이 원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곧이어 따라 나오는 것은 “미군 철수”다. 평화 조약이 이루어진 마당에 미군 주둔은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통일 10년 후까지는 현실적으로 통일 국가 안정을 위하여 미군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5) 반공, 안보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반공 안보는 필수 중의 필수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인사들이 반공과 안보에 힘겹게 치중하다 보니 최종 목표를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공 안보를 잘하고 있으면 언제인가는 통일이 오겠지 라고 막연한 기대를 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반공 안보를 넘어서서 북측 주민들의 마음을 타고 들어가 통일까지 일구어 내는 종착지점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다. 영구분단이 아니다. 영구 분단으로는 우리겨레가 종당에는 지리멸렬해 질 수 밖에 없다.

## 6) 흡수통일 하면 망한다?

잘못된 말이다. 준비 없는 통일은 물론 성공하지 못한다. 흡수 통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 능하기만 하다면 흡수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필요한 준비

여부가 문제다.

북 정권이 언제 무너져 내려도 남에서 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대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북 주민이 앞장서는 남으로의 흡수 통일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그렇게 된다면 흡수 통일 후 남측 주도 경제 건설 후 완전 통합이 가장 효율적이고 낭비가 적으며 바람직하다.

### 7) 갑작스런 통일로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 찬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온 국민이 통일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위의 네 가지 필수조건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대박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평상시 통일에 대한 실사구시적 통일대박 인식과 공감대가 그만큼 중요하다. 어느 상황에서도 통일이 되는 즉시 준비된 위의 네 가지 구도로 돌입하자. 그러면 성공적 통일대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갑작스런 통일로는 10년동안 남북 분리관리가 어려울 것

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위의 네 가지 필수 조건 유념 여부와 정도에 달린 것이다.

## 8) 중국 등 주변 강대국

“통일은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에 달려있다.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눅든 형태로는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점령 4강이 모두 대놓고 통일을 반대하는 상황으로부터 출발해서 통일을 이끌어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소한 겉으로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데는 없지 않은가?

중국 역시 한국 주도 통일을 달가워할 리는 없지만, 근래 중국도 현실적인 실리 차원에서 실사구시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주체인 우리에게 달린 일이다. 처음부터 포기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다만 통일 전이나 후나 중국을 의식해서 미군이 북상하여 주둔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 9) 인권 문제

북조선 동포들이 억압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프기 짝이 없다.

그들을 위하여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 높여 인권신장 문제를 외친다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인권 운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법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국제 협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다. 통일 없이는 근본적 해결 방법이 없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인권이란 부차, 3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10) 탈북인 문제

탈북인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는 그들이 잘 정착하여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통일을 위하여 그들을 직접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그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정착하여 안정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북에 남은 일가 친척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11) 신뢰 프로세스의 올바른 방향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한다.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이 개념에서 실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측을 2원화 하여, 북측 주민들에 대해서는 신뢰프로세스를 지향하는 자세를 통하여, 적대감을 풀어가도록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실제로 통일을 이루는 요체다.

북측 집권 당국에 대해서는 협상 차원에서 신뢰를 형성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러나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남북 정부가 사실상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고래로 병법에서 속임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과도한 기대 속에 실망이나 좌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실인즉 북 정권으로부터 “받아오는” 신뢰가 아니라, 우리가 북 주민들에게 적립하여 쌓아 “주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들이 남측 정부와 주민들에 확실한 신뢰를 갖도록 만들어 주어 그들의 마음이 결국 남쪽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12) 북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의 허와 실

김정은의 속셈으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선 핵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비로소 경제건설이 가능해 진다고 말한다.

한편 서방세계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핵만으로는 그 체제를 지킬 수 없고, 개혁 개방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두 시각은 모두 틀렸다.

김의 생각대로 핵 보유가 인정이 되고 그 바탕 위에 경제건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 하여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 체제로는 궁핍을 면할 수 없고 백성들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 그 체제를 가지고 그 나름의 개혁 개방의 노력을 한다고 해 보았자 몇 발짝 나가지도 못한다. 남북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북 정권은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서방세계의 관점이 틀린 것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감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핵 보유가 불편하니까 그냥 해 보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북의 운명은? 결과적으로 조만간 북 정권 소멸 밖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을 뿐이다. 순리를 벗어나는 황당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일이다.

### 13) 봉쇄 압박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적극적으로 북을 봉쇄 압박하는 정책으로 활발하게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잘 하는 일이다.

그런데 실은 반쪽이 비어 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도 북을 봉쇄 압박하면서, 이것은 북 주민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서 명확히 하였다. 아마도 전에 필자가 전한 <통일은 대박이다> 영문본에 전개된 통일대박 구도의 R이론을 이해한 데서 나온 언급이 아닌가 한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라면 우리에게

는 그러한 언급 정도로도 고마운 말이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르다. 현재의 대북정책에는 북 정권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북 주민을 향하는 정책은 실종되었다. 북 주민을 향하는 적극적인 정책과 신호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없다.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라. 안 된다고만 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을 때에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떤 길이 보이기도 하는 법이다. 단선적인 사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고단수의 고차방정식이 필요한 때이다.



## 맺는말

---

전 세계 우리 동포 모두 힘을 합쳐 통일을 만들고 모두 함께 더불어 평화 속에 풍요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자.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이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모두 통일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자. 반공을 앞세워 지키기만 한다 하여 통일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평화에 중점을 두며 무사히 지낸다 하여 통일이 자연히 오는 것도 아니다. 통일 자체에 확실하게 직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세상 구석구석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통일 시켜줄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될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북한 당국은 자격도 없고, 북녘 주민들은 능력도 없다. 결국 남한 사람들로 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통일을 무시하고 그냥 지내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안가 엄청난 분단비용을 지속적으로 치르면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 종당에는 결국 지리멸렬한 나라가 되고 만다.우리는 이

불행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더욱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대물림 해 줄 수는 없다. 지금 생존해 있는 우리들이 해결해 주고 가야 한다.

우리 현실을 똑바로 보자. 우리는 충분히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돈이 적게 든다. 그리고 통일은 사실상 부담이 아니라 기회다. 그런데 대충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고 한마디로 대박이다. 유사 이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그에 따라 넘쳐나는 일자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래도 통일에 무관심하고 터부시하는 풍조에 그냥 휩쓸려 대충 살고만 싶은가? 우리 모두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자. 종북주의자들만이 통일을 크게 외친다 하여 통일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실 종북주의자들은 통일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통일 그 자체를 보자.

우리가 통일이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통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력통일 방법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정치협상으로는 결말이 안 난다. 결국은 남한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제력의 길로 가자.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녘 주민들의 민심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방법이 통일에 이르는 최선이다.

북녘 주민들의 민심이 김씨 왕조에 가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비록 40, 50년이 지난다 해도 북한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지 모른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자.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통치 집단과 피지배 계층인 일반 주민들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자. 그리하여 북녘 주민들의 피부에 가서 닿을 수 있는 방법과 수준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남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전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자.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 자체에 다소 이득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의 빈틈없는 국방력 자체로 해결토록 하자. 사소한 곳까지 신경 쓰다가 정작 본체를 놓친다면 것처럼 어리석을 수는 없다.

북녘 주민들의 민심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우리가 통일

후에 어차피 해야 될 북측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남한 총소득의 1%선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그렇다고 이것도 북측에 그냥 돈으로 넘겨주고 마는 것은 아니고, 그 규모에 해당하는 모든 실물자본을 남한에서 직접 생산해서 실물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 1% 가운데 1/5 정도는 북측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길을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초지일관 꾸준히 해보자.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머지않아 하늘로부터 이 민족에게 내리는 응답이 올 줄 안다.

그리하여 통일이 되면, 통일 마무리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바람직한 수순으로 돌입하자. 그런데 아무리 목표의식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성이 없으면 모두가 물거품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첫째,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남북 지역을 분리관리 한다. 둘째,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 지역에 투입하

는 모든 실물자본은 뚜렷한 문제점이 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측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한다. 셋째, 통일 후 10년 동안에는 군비 지출을 GDP 1% 선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도 추진 과정에서 위의 뒷 두 가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 노련한 외교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북측 지역 토지 등 부동산 원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국유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남측 지역의 토지제도 역시 국유제로 일원화 시켜서 시장경제체제의 암적 존재인 시장 실패의 한 요인을 없애자.

이리하여 10년의 통일 마무리 작업 기간이 지나면서 제반제도 단일화 작업도 모두 마무리 된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통일한국 전역을 망라하여 1인당 소득이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된다. 일본, 독일 보다 앞선다. 통일한국 국민인 남과 북의 우리들은 강성한 나라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모두 안정된 인생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자손만대의 후손들에게도 몇몇할 수 있다. 그냥 꿈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

나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마음만 먹으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가슴 벅찬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신창민, “남북한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92.8.28.

신창민, “R이론의 조건,” 신창민의 통일칼럼, 매일경제신문, 1994.12.13, 27면.

신창민, <통일비용과 통일편익(200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발간번호 116번.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초판 (주매경출판 2012.7.16.

제6판, 한우리통일출판, 2015.10.3.

## 통일개박 후기

---

### 통일대박의 구도가 만들어지기 까지

통일대박의 연원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민주평통으로부터 통일비용 추산 위촉을 받고,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을 내 놓았다.

결론은 통일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통일비용의 절대액수만 대서특필을 하게 되니 필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흐름의 연장 속에서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이 부담이라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편향된 시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 통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궁리 끝에 2007년에 이르러 국회예결위 홈페이지에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보고서를 등재하였다. 이때 바이코리안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보



게 된다는 구도를 찾아내었다. 과거 6.25때 일본이 배후에서 큰 이득을 보았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만들어 낸 구도이다. 후에 그 결과를 2012년에 책으로 엮어내면서 “대박”이라는 말로 그 어마어마한 이득을 표현하게 되었다.

산뜻하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지만 더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다소 시쳇말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언급을 하였다. 국민정서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정치구호로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통일대박론과 통일대박 구도는 우리 민족, 우리 겨레를 세계에서 찬란한 위상으로 올려줄 더할 수 없이 귀한 보배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실현하여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통일이론 중의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될 때 우리 민족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가게 되리라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

초 판 1쇄 2016년 5월 4일

지은이 신창민

펴낸이 엄상호

펴낸곳 한우리통일출판

등 록 2013년 8월 8일

주 소 우)0604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60. 내성빌딩 2층

전 화 02)3445-4461

팩 스 02)3445-4460

이메일 cms21@cau.ac.kr

인쇄·제본 유니크기획 02)714-5226

---

ISBN 979-11-951120-7-4

값 8,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11058)」

세계적으로 통일대박 내용 전파를 위한  
기부금을 받습니다.

국민은행 231401-04-272705 (사)평화통일동포연합